난방공사"나주 SRF 사용허가취소부당"

즉각 소송 통해 시시비비 가리겠다는 '입장' 취소 행정처분, 법령 무시한 '권한 남용' 주장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날 나주시가 단행한 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며 즉각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 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난방공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 미 나주시에 허가 취소 처분의 부당 성을 명확히 전달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 단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법령을 무시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 별로 '경고', '금지명령', '개선명령' 등의 처분 을 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난방공사는 이러한 법 규정을 들어 나주시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 소'는 행정처분의 가능 범위를 넘어섰 다는 주장이다.

난방공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료 사용 허가를 취득했다는 나주시의 주 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했디

난방공사는 허가 취득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했을 뿐 아 니라,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과 거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나주시가 위법 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다는 점에 서 나주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RF 품질과 관련해서는 국 가기관의 제조시설 품질검사를 통과 한 연료만을 공급받아 사용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검사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합한 연료는 제조자에게 반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시험 가동 중에 대기배출 물질을 측정한 결과 법적 배출 기준치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러한 정보를 나주시민들에게 투명 하게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난방공사는 나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서 즉각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 송·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 률적 조치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 지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나주 시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 로 공사는 또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 해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 문제가 없 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나주시가 무리 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 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 다.

"광주시, 일곡 불법

지연 이유 밝혀라"

매립 쓰레기 환경평가

광주 북구 일곡지구 불법 쓰레기 재

매립과 관련한 정밀 환경영향조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주민 단체가 시

를 성토했다. 일곡지구 불법매립쓰레

기 제거를 위한 주민모임은 19일 성명

을 내고 "시는 불법 매립 쓰레기 관련

정밀 환경영향조사가 지연되는 이유

이어 "2018년 말, 일곡동 제 2·3근

린공원 지하에 거대한 쓰레기 산이 있

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공기업인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현

LH공사)가 쓰레기를 불법 매립했고

이를 광주시가 묵인·방조했다는 사실

에 시민 공분을 일으켰다"며 "그로부

터 3년이 흘렀지만 우여곡절 끝에 진

행하기로 한 정밀 환경영향조사는 업

시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매 분기

별 오염도 측정 조사를 수행하려 했으 나, 비용 문제로 용역 업체가 마땅히

이에 대해 주민모임은 "용역비를 정 밀조사 과업에 맞게 더 높이면 될 일 이다. 세금은 국민 안전에 우선 쓰여

그러면서 "분기별 한번씩(총 4번) 조사하기로 한 내용을 반 년에 1번

씩(총 2번)으로 일부 조정해서 입찰

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지난

2018년 광주시가 책임 면피하려 한

졸속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떠올리

앞서 지난 2019년 광주시가 추진

한 환경영향조사 결과에선 제2·3근린 공원 모두 악취·토양오염도가 법적

기준 이내였다. 매립가스 메탄농도의

경우 제2근린공원은 검출되지 않아

안정화 단계였으나, 제3근린공원은

5.9%로 매립지 안정화 평가기준(5%

이하)을 웃돌았다. 그러나 관련 자문 위원회는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올해

4월 한국환경공단이 조사를 대행, 정

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키로 결정했

용역에 나선 업체가 없자, 시는 자

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환경공단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

시 방식을 조정해 재입찰 공고를 내기

한편, 지난 2018년 11월 일곡 제3근

린공원 내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부지

터파기 공사 중 지하 4~11m 지점에

서 불법 매립된 대규모 쓰레기층이 발

견됐다. 일곡 2·3근린공원 지하에는

총 14만2000t의 불법 쓰레기가 매립

이 쓰레기는 1992년부터 1996년 사

이 일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삼각산 인

근 기존 쓰레기매립장에 묻혀있던 각

종 생활쓰레기 중 일부를 옮겨 매립했

서선옥기자

된 것으로 추정된다.

던 것으로 드러났다.

로 했다.

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체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나서지 않고 있다.

야 한다"고 비판했다.

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소방,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 운영"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15일 행복초등학교 학생 190명 대상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재난 대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양소방, 교통사고 대비 실물차량 인명구조 훈련

광양소방서 광양119안전센터장(소방경 김동기)는 지난 12일 교통사고 및 차량 관련 인명구조 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내 폐차장에서 폐차예정인 차 량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훈련에 나섰다. 광양=심종섭기자



완도해경, 해안가 기름 부착 대비 유관기관 합동 해안방제 훈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13일 오후 해남군 땅끝송호해수욕장에서 해양 오염사고로 인한 해안가 기름 부착에 대비, 유관기관과 합동 해안방제훈련을 실 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



나주경찰,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교통안전 교육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최근 나주시 다문화가족와 연계하여 결혼이주 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경찰, 경찰발전협의회 임원 간담회 통해 협력치안방안 논의

강진경찰서(총경 박승기)는 지난 14일 경찰발전협의회(김영배 회장) 임원 및 경찰서 지휘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발전협의회 신임 집행부 위촉식 및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강진=김영일기자



순천경찰, 어르신 대상 범죄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는 지난 14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 관련 어르신이 안전하고 행복한 순천을 위한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김승호기자

'무면허 운전' 장용준, 구속송치…'윤창호법' 적용

재물손괴는 '공소권 없음' 불송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 가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 해, 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다른 혐의와 함께 적용됐던 재물 손괴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 로 '공소권 없음' 처분돼 불송치됐

이날 오전 8시께 검찰에 송치된 장씨는 검은색 후드를 푹 눌러 쓴 채 서초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

그는 '당시 술 마시고 운전했나', '왜 음주 측정을 거부했나', '집행유 예 기간에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 할 말 없나', '조사 앞두고 할 말 없 나'는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준비 된 차량에 올라타 오전 8시1분께 현장을 떠났다. 검찰에 넘겨진 장씨는 이날 중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

인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 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머리 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 은 지난 1일 장씨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같은 달 12일 구속 전 피의 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했으나 변호인 명의로 된 심문포기 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심사에 출

석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 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범죄 혐의점이 소명되고 도 망할 염려가 있다'며 장씨의 구속영 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에는 이른바 '윤창호법' 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 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등은 음주 측정 불응도 음주운전으로 포함해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 행위를 한 운전자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 벌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심에서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이번 사건 당 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8한편, 장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 다. 최이슬기자

인권위 "현장실습생 제도…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 6일 잠수 작업 중 숨진 고(故) 홍정운군



지난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정박장 주변 울타리에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조화가 놓여져 있다. 앞서 지난 6일 요트 선체에 따개비를 떼려던 실습생 홍군은 바다에 빠져구조됐으나 숨졌다.

여수 요트 선착장에서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 위)가 현장실습생 제도에 대한 근본적 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사건의 관계 기관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요트레저 업체에서 실습을 하던 여

수 특성화고 3학년생 홍군은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톤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패류 제거 작업을 하다 바다에 빠져 숨졌다.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 실시 결과 홍군이 일하던 요트레 저 업체는 홍군에게 잠수 자격이 없음 에도 잠수 작업을 지시하는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 사됐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 작업선 전복 사고, 2014 년 울산 자동차 하청업체 공장 지붕 붕괴 사고 등 현장실습생들의 사망 사고 이후 정부가 연이어 대책을 발표함 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직업계고 현장 실습제도 개선방안', 2018년 2월 '학 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2019년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 완 방안' 등 각종 대책을 수립한 바

인권위는 현장실습생이 기업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 등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는 현장실 습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시민사회와 교 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고 정부와 관계 기관에 촉구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관계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위험하고 부당한 현장 실습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오상호기자